

 금융위원회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설 명</h1>				
 금융감독원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<b>배포</b>	2020.8.24.(월)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김 기 한(02-2100-2630)	<b>담 당 자</b>	김영근 사무관 (02-2100-2642)
	금감원 분쟁조정1국장 박 종 수(02-3145-5210)		양진태 분쟁조정총괄팀장 (02-3145-5212)

## 제 목 : ‘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 제한… 실효성 높인다’ 제하 기사(8.25일자/24일 가판) 머니투데이에 대한 설명

### 1. 기사내용

□ 머니투데이는 8.25일자(24일 가판) 「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 제한…실효성 높인다」 제하 기사에서, 다음의 내용을 보도

- ① “금융당국이 분쟁조정안에 대해 금융회사가 연기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 ‘키코’(외환파생상품) 분쟁조정안처럼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.”
- ② “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분쟁조정과 관련, ‘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’는 규정이 있다. 금융당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.”

### 2. 동 기사내용에 대한 입장

□ 금융위와 금감원은 동 기사내용에 언급된 방안이나 계획을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	<small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</small>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<b>금융위원회 대변인</b> prfsc@korea.kr		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